

# 2023 코트라 경제논술 시험대비 시사자료

美·EU, 'ESG 공시 의무화' 임박… 수출 기업들 'ESG 경영' 속도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中의 압박이 부른 반전

◆ 美·EU, 'ESG 공시 의무화' 임박... 수출 기업들 'ESG 경영' 속도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를 아우르며 가장 급성장한 경영 트렌드를 꼽는다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ESG를 내세웠던 자산 운용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이는 '2050 탄소 중립'이란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ESG라는 거대한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계 기준과 같이 ESG 공시, 투자, 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아직은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스탠더드, TCFD(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SASB(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스탠더드 등과 같은 자율 지침을 각 기구에서 내놓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별로 ESG 공시 의무화는 임박했다. EU(유럽연합)와 미국이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은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별도로 산하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 GRI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UN의 협력기관이다. 기업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간해 제출한다. 가이드 라인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쳐 분류돼 있다. 그 동안 회계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각각 내오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GRI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참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이다. 2015년 G20 산하에 국제금융규제 및 감독역할을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설립하였다.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완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약자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이다.

SAS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기업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투자자들이 산업별로 중요한 ESG 현안에 대한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비교하고 비교 가능한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SASB는 2023년 현재 GRI와 함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사용되고 있다.

EU·미국 등 제도 추진 활발

EU는 NFRD(비재무 정보 공시 지침)와 이를 개정해 지난해 내놓은 CSRD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를 기반으로 ESRS(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를 내놓고, 내년(2024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각 회원국은 ESRS에 따라 국내법도 마련한다.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는 지난해 5월 ESRS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주제에 따른 공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 역시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 의무화 초안을 지난해 3월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시가총액 7억달러(약 1조원) 이상 기업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고, 검증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IFRS재단이 2021년 11월 설립한 ISSB는 2023년 6월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도입 여부와 적용 시점은 각국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 WEF(세계경제포럼), G20(주요 20국) 등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의 기준선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해외 트렌드 반영...기업 의견 들어야

ESG 공시가 제도화되면서 해외 증시에 상장됐거나 현지 법인을 보유한 기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ESG 공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국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회계기준원도 올 1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세우고 국내에서 적용할 ESG 공시 기준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ESG 공시 시행을 앞두고 ESG 경영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신(新)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영 전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이동했다. 공정 가스 저감, 폐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수자원 보존, 오염 물질 최소화 등에 2030년까지 총 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도 내놔다. 세계 3대 자동차 업체로 성장한 현대차·기아는 올해 2월 국제 비영리 환경 기구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의 CDP 공급망 관리(Supply Chain)에 가입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 관리 현황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5월에는 1차 협력사 360여 회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했다.

◆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中의 압박이 부른 반전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늘 두 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날이 조만간 올지도 모른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달러(약 214조원)에서 2022년 1558억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억달러에서 1098억달러로 51% 늘었다. 중국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재빨리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도 이 같은 ‘탈중국’에 나선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은 넘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대를 팔았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대로 곤두박질쳤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인도 등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K식품의 대표 격인 CJ도 한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미국 시장에 그룹의 사활을 걸었다.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1698억원에서 2022년 8조2854억원으로 급증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놀라운 반전을 일궈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SM·YG·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2000년대 초 급성장하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유럽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자 당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서구보다 훨씬 가난한 중국이 이제 겨우 그들과 경쟁하려 하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외교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압력을 일삼았다. 중국 시장을 걸어 잠그면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그러면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봤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무역 적자는 20년간 이어져 온 중국 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성장 통이지만, 체질 개선이 끝나면 우리는 훨씬 당당하게 중국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